

● 제2회 정책경연의 장(2021년 3분기)

● 정책위원회, 정책제안서 심의평가표 취합 (2021.09.08.~09.10.)

1. 평가표 및 평가방법

- (1)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 올라갈 후보로서 적합한가?
→ 시대전환 강령과 정책기조에 부합하는가?
- (2) 평가기준 : 시대전환 강령 및 당헌
<https://www.transition.kr/home/sub0102.php>
- (3) 평가표 표시 : ○, △, X
→ ○ (적합) △ (양호) X (미흡)
→ X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 X 평가시
정책기획조정회의에 부의 불가
- (4) 해당 제안서에 대한 코멘트 있을 시 기재

2. 제출된 정책제안서 목록

No.	위원회	정책명 (빠띠 제출 링크)
1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제도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4595
2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4596
3	홍보위원회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067
4	교육위원회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 인재 채용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07
5	소상공인위원회	복원기획자와 독립기술인에 대한 지원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87
6	사회복지위원회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인지장애판정자) 서비 스 제공 방안 https://transition.parti.xyz/front/posts/45395

3. 심의 평가 결과

(1) 과반수 이상 X를 받은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은 정책기획조정회의 심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2) 평가 코멘트 (세부적인 ○/△/× 평가는 삭제)

No.	위원회	정책명	평가 (○/△/×)
1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제도	
	<p>코멘트 : 1) 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찬성.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있는데, 추가 조항 만드는 것으로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일인지 확인. 2) 기존 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좋겠음. 3) 장애인복지법 제25조는 정부의 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조항으로 정부가 정부를 상대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상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됨.</p>		
2	장애인위원회	장애인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p>코멘트 : 1) 장애인 지원 관련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찬성. 2) 장애인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용량의 확대가 필요한 내용으로 사료 됨. 장애인 자동차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 차량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고 지원할 필요를 느낌.</p>		
3	홍보위원회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	
	<p>코멘트 : 1)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아젠다로 적정. 2) 납세와 고용 등 사회적 공여를 하지 않는 외국 설립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 납부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의 부여가 적합할지 의문. 3) 현재 재외국민투표와 중복되고 있으며, 현재 재외국민투표규정을 고치지 않고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은 1인 3표를 행사하게 되고, 비례대표를 제외한 선거구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게 되어 오히려 국내 유권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큼. 재외국민투표 법 조항을 삭제하고 재외국민 국회의원 선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역구를 규정할 것인지, 재외국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기본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 또한 재외국민과 해외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관심을 필요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에 대한 내용을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 및 보호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음. 차라리, 현재 재외국민투표의 활성화 정책을 만들거나 현행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 또는 4순위를 재외국민으로 추천하게 하는 등의 법 적용이 더 현실성이 있어보임. 4) 공청회 등 다양한 계층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임, 국회의원 역할론 미흡.</p>		

	교육위원회	수도권 올인 구조 해체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채용	
4	<p>코멘트 : 1) 바람직한 문제의식임.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음. 지방대학 육성에 이미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음. 지역인재 채용 비율 높이면 수도권 대학생 비중이 낮아 짐. 제로섬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음. 2) 제안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함. 지역소멸은 한국의 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고, 그중에 지방대학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임. 하지만, 지역소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생산성 저하와 지역 일자리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음. 아무리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으로는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수밖에 없음.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과 같이 지역산업 발전정책과 연계하는 방향이 같이 녹아 있었으면 좋겠음. 3) 좋은 법안인 듯, 더 구체화 되길, 이해충돌 여부 중요해 보임. 4) 이미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진행 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학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피교육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p>		
	소상공인위원회	복원기획자와 독립기술인에 대한 지원	
5	<p>코멘트 : 1)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새로운 아젠다로 적정. 2) 제안은 매우 훌륭하지만, ‘복원기획자’ 와 ‘독립기술인’ 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음. 제안자께서 활동하시는 단체(또는 기업)에서 쓰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하지만, 이 제안을 보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또한 복원기술자와 독립기술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음. 이러한 명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좋겠음. 3) 자원 재활용 측면, 소노동 대상 보호, 새로운 일자리 개선에 희망이 있어 보임. 4)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제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 짐.</p>		
	사회복지위원회	장기요양서비스 미등급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판정자) 서비스 제공 방안	
6	<p>코멘트 : 1) 치매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이 감소 되고 개인의 삶의 안정적 유지 기간을 늘려줌으로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복지서비스 지원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찬성. 3)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국가의료시스템이 살피는 좋은 방안으로 강화되길 희망.</p>		